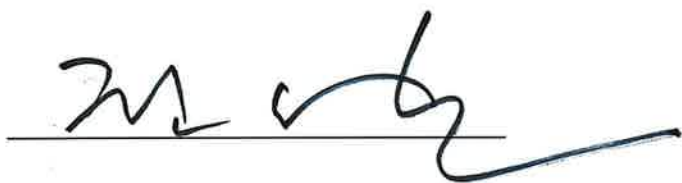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7차 회의 회의록

1. 일 시: 2025. 1. 13.(월) 16:00~17:30
2. 장 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3. 출석인원: 별지 기재와 같음
4. 내 용: 별지 기재와 같음

등록번호	518
등록일자	2025.2.19.
처 리 과	기획운영담당관실

위 원 장



간 사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7차 회의 회의록

2025. 1. 13.

사법정책자문위원회

## I. 개요

- 일시: 2025. 1. 13.(월) 16:00~17:3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권오곤(위원장)
  - 김영화, 김영훈, 이경춘, 전원열, 조현욱, 차병직(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윤성식(간사), 이문렬(서기)
- 배석자
  - 장정환(주무위원), 김택우(정보화기획심의관, 실무지원단원)
  - 황인성(실무지원단장), 고병석, 고원혁(이상 실무지원단원)

## II. 의사개요

### 1. 제6차 회의 회의록 확정

-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을 확정하였음

### 2. 재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

#### 가. 기초발제

- 장정환 주무위원, 사법부 인공지능 구축 방향, 재판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 등을 보고함

#### 나. 토론

- 다음과 같은 위원장의 질의 및 장정환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위원장

- AI 이용에 관한 외국 사법부 사례를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 회의 자료 61면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판결 기재레 자동생성’ 부분이 생산성이 낮고 모델 구축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현실적으로 판사들에게 가장 효용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지속 되었으면 좋겠음. 한편 ‘소송기록 익명화’ 부분은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회의 자료 60면 ‘진술증거 분석’ 부분에서 ‘특정인의 반복되는 진술의 유사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복수인의 진술(가해자와 피해자) 유사성과 상이점을 비교 분석’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AI 모델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믿지 않게 되는 결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델 구축 과정에서 이 부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장정환 주무위원

-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제3차 회의 안건인 ‘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그 법적·윤리적 기준’ 자료에서 설명드렸음
- 판결문 초고 작성은 판사들이 가장 기대를 하는 부분임. 다만, 추론에 해당하는 영역은 인공지능모델 중에서도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부분이고,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판결문 초고 작성이 지원되더라도 판사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음. 설명드린 내용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개발 가능성이나 효용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판결문 초고 작성까지 생성할 수 있게 되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다음과 같은 김영훈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간사, 장정환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김영훈 위원

- AI를 활용한 업무의 편의성 및 정확성 도모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 다만 법원 뿐 아니라 변호사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재판제도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판결문 전문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음. 변호사 단체에서도 인공지능모델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 간사

- 판결문 전문 공개를 위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비실명화 작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입법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판결문 전문 공개는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제안해 주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법조인들이 AI를 통해서 원활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문제를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음

○ 김영훈 위원

- 지난 회의 때 소개된 해외 사례 중 AI를 활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판결문 비실명화 작업을 수행하는 국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인공지능모델 개발에 그런 부분도 포함되기를 기대함

○ 장정환 주무위원

- 소송기록 익명화 작업도 저희가 상정한 모델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비실명화 작업이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조현욱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김택우 정보화기획심의관의 답변, 위원장의 의견이 있었음

○ 조현욱 위원

- 재판업무에 인공지능 활용은 당연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AI를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지고, 법관의 업무경감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임
- 회의 자료 61면을 보면 ‘판결 기재레 자동생성’, ‘판결문 등 작성 편의성 제고’, ‘계산보조’ 부분의 모델 구축 적합성이 매우 낮게 나옴. 회의 자료 60면에 설명된 ‘주장서면 쟁점 분석’, ‘진술증거 분석’이 가능할 정도면 ‘판결 기재레 자동생성’도 가능해 보이는데, 모델 구축 적합성이 낮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람
- 형사기록을 복사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 직원 2명이 2~3일간 비실명화 작업



을 하는 사례가 있음. 법원과 검찰이 협의하여 AI를 활용한 형사기록비실명화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 김택우 정보화기획심의관

- ‘판결서 기재례 자동생성’과 관련하여 정형적인 사건의 기재례는 손쉽게 개발할 수 있으나, 판사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새로운 쟁점이거나 기존 연구가 부족한 부분임. 정형적인 사건의 기재례는 판사님들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모델 구축 적합성이 낮게 평가되었음
- LLM의 경우 아직까지도 허위정보를 생성하기도 하지만, LLM이 특정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요약하거나 분석할 때에는 허위정보를 생성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음. 진술증거 2개를 놓고 그 진술 내용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허위정보 생성이 적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모델 구축 적합성이 높게 평가되었음
- 비실명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위원장

- 소송기록 비실명화 작업과 관련하여, 사건 당사자들이 열람·복사할 때에도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야 하는지?

○ 조현욱 위원

- 변호인들이 기록을 복사할 때에도 인적사항, 주소를 가리고 복사함

○ 위원장

- 외국 사례를 보면, 당사자들은 기록을 볼 수 있되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공개하면 법원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당사자에게 형사기록 중 일부를 가리고 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임
- 우리나라에 법원모욕죄가 없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지만, 당사자들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 당사자들이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없이도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람

○ 조현욱 위원

- 위원장님 의견과 같이 비밀유지 각서를 받아 변호인들이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없이 형사기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희망함



▣ 다음과 같은 차병직 위원의 의견, 이경춘 위원의 질의 및 이에 대한 장정환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차병직 위원

- 오늘 안전에 대하여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음. 우리나라가 이런 분야에서는 외국에 뒤처지지 않고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도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믿음

○ 이경춘 위원

- 회의 자료 11면에 전문인력이 최소 11명이 필요하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11명 정도가 보강될 경우 자체개발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외주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

○ 장정환 주무위원

- 사법부 정보화사업 자체를 외주 방식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외주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음

○ 이경춘 위원

- 외주업체 입장에서 사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구축사업을 위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력 규모를 필요로 하는지?

○ 장정환 주무위원

- 그 부분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진행하지는 않았음. 사법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파트 자체가 별도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기존 관련 업무를 했던 담당자가 지금 겸임하고 있는 상태임. 최소한 사후관리가 가능할 정도로 인공지능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인적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구체적 규모를 파악하지는 못하였음

○ 이경춘 위원

- 이번 사업의 경우 결국 국내업체 입장에서든 새로 연구하고 개척해야 될 분야인 것 같음. 결국 사법부에서 추가적으로 인적기반을 확보하여 구성한 조직의 역할은 AI 구축사업의 진행 방향을 제시하고,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라 예상함

○ 장정환 주무위원



-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법부 내부의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관리·유지하는 등 관련 업무가 많은데 그에 비해 현재 조직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고 평가하고 있음

○ 이경춘 위원

- 여러 분야에서 AI시스템이 활용되고 있고 결국 사법부에서도 재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첨단시스템을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함. 건의문이나 검토내용에 대하여 특별히 덧붙일 의견은 없음

■ 다음과 같은 김영화 위원, 위원장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장정환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김영화 위원

- 최근에 지인의 소개로 AI 오픈소스를 모아놓은 'Hugging Face'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특정 프로그램에 '지뢰찾기 게임'을 만들어달라고 올렸더니 1분 만에 만들어주는 것을 보고 AI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몸소 깨닫는 경험을 하였고, 사법부에서도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대전제에 공감을 하고 있음
- 다만, AI가 법관들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도가 될 경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AI가 직접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들의 보조 역할에 그친다는 것을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음
- AI가 결국 사법부 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함. 축적된 데이터가 한쪽으로 편향될 경우 편향될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 있음. 또한 축적된 데이터 이외에 새로운 법적 쟁점이 나올 때에는 AI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도 궁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사법부는 어떤 방향을 갖고 있으며, 해당 내용들이 건의문에 반영될 수 있는지 질문드림

○ 장정환 주무위원

- 인공지능은 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그 부분은 제3차 회의 건의문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재판지원을 위해 활용될 것



이라는 요지로 나타나 있음. 회의 자료 57면 이하 평가결과 도표 중 ‘법적·윤리적 검토’ 항목에서 ‘안전, 신중, 위험’ 부분도 판사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임

- 기존에 판사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수동으로 검토했던 작업들을 인공지능이 미리 정리해준다면 판사들이 판단이나 추론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임
-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발전해서 고차원적인 모델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든 책임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법관들이 지게 될 것이므로 인공지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삼가야 될 것이며, 그런 내용을 법적·윤리적 기준에 충분히 담아낼 계획임

○ 김영화 위원

- 말씀하신 취지 잘 이해하였음. 회의 자료 64면 ‘온라인 전국관할 조정센터’에서 AI가 생성한 기초안을 바탕으로 법관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들도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 장정환 주무위원

- 해당 표는 현재 아이디어 차원에서 마련된 것임. 실제로 온라인 전국관할 조정센터를 만들게 되면 더 세밀하게 분석·설계하게 될 것 같음. 현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음

○ 위원장

- 김영화 위원께서 건의문에 반영을 원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화 위원

- 현재 건의문(안)의 방향이 주로 자체 모델 구축, 예산·인력 확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3차 회의에서 ‘법적·윤리적 기준 제정 필요’에 대한 의결 당시 5개의 원칙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다음과 같은 전원열 위원의 질의 및 이에 대한 김택우 정보화기획심의관의 답변, 위원장의 의견이 있었음

○ 전원열 위원





- 재판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사업에 법원도 당연히 적극 참여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함. 우리나라 기업들의 AI 프로젝트 80%가 실패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사업 추진 필요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발제하신 내용을 보고 사업타당성·적합성에 대한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음
- LLM이 등장한 후 특정 분야에서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sLLM이 탄생하게 되었으나, sLLM은 데이터 범위를 줄인 탓에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꽤 있었음. 재판은 사회의 복잡다기한 현상을 다루므로 sLLM으로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여건상 sLLM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sLLM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 GPU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다음으로, sLLM을 만든 후의 평가용 데이터나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최근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테스트용 점수는 잘 나오는데 다른 작업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종종 나오고 있음. 따라서 모델 구축 시부터 평가용 데이터와 평가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음
- 세 번째로,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법부에서 만들어 놓은 재판지원용 인공지능 모델을 재학습시키고 업데이트하는 작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작업은 그 성격상 내부 직원보다는 외주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는 기술을 계속적으로 반영해나갈 것인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한편 김영훈 위원께서 ‘법원 뿐 아니라 변호사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견 드리겠음. 사법부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사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므로 행정처 주도 하에 AI 구축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만, 변호사 업계는 성격이 다른 면이 있음. 개별 사용자들이 인공지능을 이미 활용하고 있으므로 변협에서 이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변협 차원에서 변호사용 인공지능과 같은 모델을



검토할 필요성은 낮다고 보임

- 이미 변호사들 중 상당수가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업계에서의 인공지능 역시 자체적으로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함

○ 김택우 정보화기획심의관

- sLLM 사이즈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30billion에서 60billion 정도의 규모면 적정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 전원열 위원

- 사법부 정도의 규모라면 파라미터의 개수가 70billion~80billion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김택우 정보화기획심의관

- 최근에는 30billion에서 60billion 정도의 언어모델에 어떤 RAG를 붙이느냐가 그 품질을 차별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RAG 선택을 통해 더 좋은 품질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
- 언어모델을 만든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업체를 여러 군데 만나보았는데 대부분 라마2 기반으로 만들었음. 최근 라마3.2까지 나온 상태인데, 학계 전문가에 따르면 라마3.2 정도면 언어모델은 거의 완성되었고, RAG만 잘 선택하면 된다는 의견을 주셨음. 좋은 언어모델과 이에 최적화된 RAG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음
- 평가기준과 관련하여서도, 테스트 이외의 환경에서도 적절한 품질이 나올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음. 한편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관계로 향후 1~2년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웠지만, 3년 이후는 기술변화를 계속 살피면서 계획을 수립해야겠다는 방향으로 잡고 있음. 조언해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도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음

○ 위원장

- 전원열 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음. 김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 전원열 위원

- 과거 이와 관련된 논문을 한 편 작성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결론은 ‘판결문 공개



는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다'였음

- 기본적으로 영미법계에서 1심 판결문은 판결주문만 있거나 형식적 기재사항 외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유를 부기하는 정도로 끝나며, 한국과 같이 상세하게 판결문이 작성되지 않음. 따라서 영미법계에서 '판결문 공개'는 2심 이후 법리적 다툼이 있는 재판에서의 판결문 공개가 주로 논의되고, 건수도 실제로 많지 않음. 미국에서 운영하는 'PACER'라는 시스템은 연방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 한국에서 전국 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 전부를 공개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함. 영미법계와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대륙법계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한국의 개인정보 공개 범위가 훨씬 넓은 편에 속함
- 판결문 공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단계별로 조금씩 확대되어 왔음. 과거 열람을 원하는 제3자가 법원에 방문하여 물리적으로 판결문을 보는 것과 달리, 현재는 '공개'를 요청하는 의미가 '디지털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는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이므로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는 과거와 차원을 달리하게 될 것임
- 판결문 공개를 지금보다 확대할 경우 '비실명화' 문제가 크게 대두하게 될 것임. 이번 사업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실명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이 해결되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을 것임
-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얹혀 있는 사안임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막연히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힘

#### ○ 위원장

- 기록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의견 드리겠음. 국제재판소는 모든 기록에 **Public version**과 **Confidential version**이 있음. **Confidential version**에도 당사자들이 볼 수 있는 것과 법원과 한 쪽 당사자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음
- 기록 생성 단계에서부터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것들을 당사자들이 지정해서 그것은 공개하지 않고, 공개해도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음



## 다. 건의문 의결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의결하였음

○ ① 지향점

-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하여 적절한 재판지원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

○ ② 대한민국 사법부의 인공지능 구축·활용 방향

- 사법부의 재판자료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사법부 내에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공적인 인공지능 모델 구축, 운용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사법데이터 수집·관리, 충분한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 체계적인 사업추진 조직 마련이 필요함
- 구체적인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때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과 국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 법적·윤리적 위험성, 사법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제8차 회의 안건 설명

### 가. 안건 보고

■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방안

- 민동근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장, 논의의 필요성,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방향의 지향점, 주요 쟁점, 위원회 논의 필요 사항 등을 보고함

### 나. 질의 및 답변

■ 다음과 같은 위원장, 전원열 위원, 이경춘 위원의 질의 및 이에 대한 민동근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장의 답변이 있었음

○ 위원장

- 사법보좌관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 민동근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장

- 영어에는 없는 단어로 알고 있음. 독일 사법보좌관협회에서 온 답변에 따르면



대응하는 단어가 없어서 ‘Rechtspfleger’라는 독일어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함

○ 위원장

- 현재 수석사법보좌관이 있는지?

○ 민동근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장

- 수석사법보좌관의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관례적으로 수석사법보좌관을 두고 있음.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전원열 위원

- 수석사법보좌관은 각 법원마다 있는 것인지? 몇 분이 계시며, 대체로 직급은 어느 정도의 분들이 맡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민동근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장

- 전국에 9명이 있으며, 이사관 2명과 부이사관 7명이 보임되어 있음. 대부분의 법원에 배치되어 있지는 않음. 담당 업무에 큰 차이는 없으나, 장기재직자 중 업무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주로 선발되기 때문에 해당 법원에서 쟁점이 되거나 복잡사건에 대한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경춘 위원

- 단순한 선임보좌관의 의미인지? 아니면 조금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 민동근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장

- 기본적으로 선임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적으로도 그에 맞는 역할이 부여되기는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음

○ 이경춘 위원

- 처음에는 서기관에서 대부분 선임되다가 부이사관, 이사관 사법보좌관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지위 같음

○ 민동근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장

- 부이사관 사법보좌관이 등장하면서 수석사법보좌관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음

#### 4. 제9차 회의 안건 선정

- ▣ 위원장, 제9차 회의 안건으로 ‘시니어판사 제도’를 선정함



### 5.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7차 회의 회의록 작성 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할 부분이 없다고 결정함

### 6.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자료 외부 공개 여부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7차 회의 자료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1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	공개
2	재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	공개
3	안전 설명자료(사법보좌관제도 발전 방안)	공개

## III. 다음 회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8차 회의

- 일시: 2025. 2. 19.(수) 16:0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끝).